

테마칼럼

국가와 사회

금융&BIZ

과학과 기술

지역과 지역

신용은 돌도 돈으로 만든다



오수상

사회적 약속에 기반한 화폐시스템은 신용을 생명으로 한다. 사회 구성원 간에 신용이 균건하면 돌도 돈이 될 수 있지만, 신용기반이 허물어지면 황금으로 돈을 만들어도 돈이 돌지 않는다.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는 말이 있다. 복잡한 수식이나 현학적인 전문용어를 쓰지 않고 고도의 화폐의 기능을 잘 표현하는 말이 아닐 수 없다. 화폐는 국가경제의 생명력을 지탱하는 혈액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돌고 또 돌아야 한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돈이 돌지 않으면 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말이 될 것이다. 그런데 돈을 돌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남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에 속해 있는 작은 섬인 얍(Yap)섬은 경제사에서 매우 유명한 섬이다. 이 외딴 섬이 경제학계에서 유명한 이유는 석유와 같은 부존자원이 풍부하기 때문도 아니고, 유명한 경제학자들을 배출한 요람이기 때문도 아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얍섬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라이(Rai) 또는 페이(Fei)라고 불리는 돌로 만든 돈 때문이다. 사실 돌화폐는 이 섬에서 최초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일찍이 마야문명에서는 정교한 수공 기술로 예술적 가치가 높은 돌화폐를 만들어 사용했던 바 있다. 그에 비해 얍섬의 돌돈은 특별한 형태로 가공되지도 않았고 특이한 무늬도 새겨지지 않았으며, 단지 돌의 크기에 비례해서 가치가 부여되었을 뿐이다. 이처럼 예술적·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석회암 조각리에 불과한 돌돈이 유명해진 것은 이를 사용하는 섬 주민들의 행태 때문이다. 이 섬에서 생산한 마리, 과일 한 바구니와 같

이 적은 금액의 거래에서는 작은 크기의 돌돈이 오고 간다. 그러나 집 한 채, 배 한 척 등과 같이 거래 금액이 커지면 그에 걸맞는 크기의 돌돈을 주고 받아야 하는데 큰 돌은 크기와 무게 때문에 이동이 쉽지 않았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수레를 사용하고 인부를 동원해서라도 그 큰 돌을 자기 집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했을 것이다. 그러나 얍섬의 주민들은 이 문제를 아주 간단히 해결했다. "이 집을 내가 샀으니 그 대가로 마당 앞의 큰 돌은 이제부터 네 거야."하고 원래의 돌 주인이 공언해 주면,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은 채 돌을 옮기기가 않아도 사회 구성원 전부가 새로운 돌돈의 주인을 인정해 주었던 것이다. 심지어는 자기 조상 소유의 아주 큰 돌돈이 섬 앞바다에 가라앉아 있다는 어떤 사람의 주장을 섬 주민들이 인정해 주어서,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그 돌을 대가로 집과 땅을 사고 팔기도 한다. 담당 의문이 들 것이다. '아니, 자기 집에 옮겨놓지도 않고 표시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 자기 돈이라고 우길텐~.' 그렇다. 일부 사람들이 신용을 여기고 남의 돌에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이러한 화폐시스템은 일거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지만 얍섬의 주민들은 신용을 반드시 지키는 전통을 500년 이상 이어왔고, 이러한 사회적 신용체계가 별 가치가 없는 돌을 돈으로서

경계 내에서 활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이 된 것이다. 사실 얍섬의 화폐시스템은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의 화폐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정부가 그 가치를 법으로 인정하는 법화(法貨)이기 때문에 통용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종이 조각리에 불과할 뿐이다. 아니, 사실 얍섬의 화폐시스템이 선진국들보다 나은 면이 있다. 법화를 발행하고 보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섬 사람들은 신용을 지키는 덕에 화폐 주조 및 보관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화폐의 편익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약속에 기반한 화폐시스템은 신용을 생명으로 한다. 사회 구성원 간에 신용이 균건하면 길거리에서 굴러다니는 돌도 돈이 될 수 있지만, 눈앞의 이익을 쫓아 화폐를 위조하거나 채무를 갚지 않아 신용기반이 허물어지면 황금으로 돈을 만들어도 돈이 돌지 않는다. 이로 인한 경제 파탄은 우리 모두 뿐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재앙으로 남는다.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체계를 남기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 훌륭한 유산이 될 것이다.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3개월도 못간 광주시 교통개선사업

광주시가 수억원을 들여 교통소통 개선사업을 추진했으나 3개월도 채 안 돼 또다시 수억원이 소요되는 추가 사업을 추진키로 해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12일 "상습 정체구간인 서구 관천중합터미널 주변 차량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2억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해 2개월간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2억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천중합터미널 주변 차량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개월간 건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중합터미널 주변은 교통체계가 개선사업 이후 차량 흐름이 개선되는 커녕 오히려 정체가 더욱 심해져 운전자와 시민들의 불만을 사왔다. 결과적으로 시의 근시안적인 교통행정으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혼잡을 가중시키는 꼴이 된 것이다. 교통체계 개선 사업은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시행해야 한다. 교통혼잡 요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교통체계 개선사업도 계획수립 때 차량 동선 분리 등에 따른 차량 지·정체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했다. 이런 기초적인 상식마저 무시한 졸속행정 때문에 현재는 현재대로 날리고 시민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광천동 버스터미널 주변은 대형 유통점과 예식장 등 교통혼잡 유발 시설들이 밀집돼 있는 상습정체 구간이다. 결혼식이 몰리는 토요일에는 혼잡은 극에 달한다. 따라서 이곳 교통문제는 혼잡유발 시설을 분산시키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확실한 교통대책을 세워야 한다. 일시적인 교통체계 개선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잘못된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다른 분야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기 바란다. 3개월도 못 가는 행정으로는 광주시가 내세우고 있는 '1등 광주' 건설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

김성이 장관 임명 '오기 인사' 실망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이 논문 중복 게재 및 탈세 의혹 등으로 사퇴 압력을 받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 인사를 강행한 것이다. 김 장관은 새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인사로 기록됐다. 법률상 잘못은 없다. 현행 국회법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뒤 20일이 지나면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장관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여론이 거센 점을 감안하면 '오기 인사'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청와대는 행정공백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의혹을 감안하면 옹색하기 짝이 없다. 김 장관은 탈세, 논문 중복 게재, 공금유용, 신군부 정화사업 협조, 미국 국적 딸의 건강보험 혜택 등의 의혹을 받아왔다. 또 "신앙심이 복지정책의 성과를 결정한다"는 주장을 펴 자질 논란도 일으켰다.

김 장관의 인사를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다. 청와대는 이미 3명의 장관 내정자가 중도 하차한 상황에서 더 이상 밀릴 경우 국정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을 지 모르지만 국민들에게 '오기 인사'로 비칠 뿐이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마당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 나갈 지도 의문이다. 이번 기회에 인사청문회를 규정된 국회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자질, 능력의 검증 등을 통해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견제하는 장치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문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국회와 '부작적' 판정을 내리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지나면 임명하면 그만이다. 청문회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은 방지되지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고길석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하루하루를 지나다 보면 자기 몸의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종종 있다. 젊어서는 꿈을 이루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나이가 좀 들면 '혹시 좋지 않은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만40세 이상은 누구나 2년에 한 번씩, 즉 출생년 출생자는 출생년에 짝수년 출생자는 짝수년에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기고 정장훈 우리나라에 국립공원 제도가 도입된 지 40년, 그리고 이를 맡아 관리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립된 지 20년이 훌쩍 넘었다. 그동안 도시화·산업화가 지속되면서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매년 여의도 면적(8.5km)의 6천800배가 넘는 산림을 마구잡이식으로 개발하면서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고 파괴하여 왔다. 개발자들은 개발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수도권으로의 접근성, 주변 자연환경 여건, 시세 및 향후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생애적은 땅을 선호하는데 국립공원지역이 약방의 감초처럼 그들의 도마 위에 오

無等鼓 코드인사 이명박 정부가 공식 출범한 지 채 한 달도 안 돼 '코드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귀가 닳도록 들었던 코드 인사 문제가 새 정부 출범 직후에도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은 지난 12일 한 강연에서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도 "코드가 다른 사람들이 임기 가 끝날 때까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정권이 바뀌었으니 '노무현 사람'은 나가라는 것이다. 참여정부 때 문화·연륜·체육기관(단체)장 가운데 코드 인사 시비에 휘말린 사람은 10여 명에 이른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가 남아있는 만큼 퇴진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자세다. 코드 인사와 연결지을 수 있는 것은 '연륜제(獵官制·spoils system)'다. 연륜제는 정당에 대한 공헌도나 인사권자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시스템이다. 민주주의의 본산이랄 수 있는 미국에서도 바뀐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고위직을 임명하는 연륜제가 일정 부분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에서 구분해야 할 것은 연륜제와 정실주의(情實主義·patronage system)다. 엄밀하게 따지면 연륜제는 정치적 신조 등을 기준으로 하지만 정실주의는 인사권자와의 친소관계에 따른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 당시 임명됐던 인사들이 연륜제에 의한 것이었는지, 정실제가 가까운 것이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 장관들의 요구 또한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이번 논란이 '역 코드' 인사의 태동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문화·연륜·체육기관(단체)장은 국민을 위한 일꾼이지 정권교체에 따른 '전리품'이 아니다. /박지경 체육·여론매체부장unipark@

인터넷 의약품 불법판매 못마나 안마나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의약 분업이 정착 단계에 있다. 의사가 진단해 처방전을 발행하면 약사가 그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투약하는 것으로 의사 처방전 없이 이의약품은 구입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불법으로 의약품 판매가 이뤄져 국민 건강을 위협해 단속과 처벌이 시급하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발모제 '미크로겐', 발기부전제 '비아그라' 등도 인터넷에 버젓이 광고를 하면서 판매되고 있다.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은 가져가진 않더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아니면 밀수품일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부작용은 물론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작용으로 피해를 보아도 보상받을 방법은 거의 없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 판매를 차단해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최영지·광주시 동구 신수2동

해의 입양아 99%가 장애아... 국내 입양 늘었으면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썼던 우리나라가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국내 입양아 해의 입양을 앞질렀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장애를 가진 아이 100명 중 99명이 여전히 해외로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아들을 데리고 가는 입시 보호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니 예쁘고 건강한 아이들이 차례차례 양부모를 찾아 떠나면 장애를 가진 아이들만 남는다고 한다. 국내 입양에 실패 한 뒤 이 아이들의 유일한 희망은 파란 눈의 양부모를 찾는 것이다. 기다려도 양부모를 찾지 못하는 장애아들은 여기저기 보호시설로 옮겨지는 불운한 상황 이 돼버린다. 그러나 장애가 없는 아이들조차도 부모가 돌다 쌍꺼풀이 있으니깐 반드시 쌍꺼풀이 있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머리카락이 곱슬이면 안된다든지, 혈액형은 반드시 맞아야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는 사례는 여전하다. 심지어 아이가 잘 생겼는지, 친부모의 키는 얼마나 큰지 따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앞으로 해외입양이 더 줄어들고, 특히 장애아 입양도 늘어나 우리 사회가 명실상부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로 우뚝 서려면 하는 바랍이다. ▲김세준·광주시 남구 도금동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for subscription and advertising.